

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중요한 큰 걸음"이라며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급적 종전선언이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 뒤흔든 '미투'... 성폭력 끝내고 성평등 시작으로

■ 법조계서 촉발한 미투, 문화계 넘어 정치권까지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창원지검 통영지청)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과거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면서 국내에 '미투(Me too · 나도 당했다)' 운동이 본격화했다.

서 검사는 게시 글에서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metoo' 해시태그를 달았다. 같은 날 저녁에는 TV방송 뉴스에 공개 출연해 파급력을 보였다. 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은 2007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제안했고, 2017년 미국 영화계에서 유명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폭로로 점화했다.

국내 미투 운동도 문화계에서 먼저 번졌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문학계의 거목이었던 고은 시인이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극계 대부로 불리던 이운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도 단원들에게 상습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조재현, 오달수, 김생민 등 왕성히 활동하던 연예인도 미투 지목을 받고 대중 앞에서 얼굴을 감췄다. 배우 조민기가 제자들로부터 미투 폭로를 받은 후 경찰 출석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위계 관계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을 주로 고발한 미투의 화살은 정치인까지 겨냥했다. 유력 대권주자로 꼽힌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수행비서가 3월 5일 방송 뉴스에 나와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월 10일 미투 폭로가 나온 직후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나중에 철회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미투 지목을 받고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았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유명인을 향한 미투가 주목받는 사이에 대학교수를 겨냥한 대학 재학생 · 졸업생의 미투도 잇따랐다. 성폭력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교수들은 강단을 떠났다. 4월부터는 학교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스쿨 미투'도 본격화했다.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은 창문에 'metoo' 모양으로 접착식메모지(포스트잇)를 이어 붙여 스쿨 미투를 촉발했다.

일반 시민도 SNS에서 성폭력 경험을 익명로나마 폭로하면서 위로와 지지를 주고받았다. 미투 폭로자들에게 '위드유(#withyou · 당신과 함께)' 해시태그로 지지를 표하는 움직임도 일었다.



▲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부라부라' 대책 내용은 각계...대법 "성범죄 다룰 때 '성인지감수성' 갖춰야"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 검찰은 조직된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80여 일간 조사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 검사 성추행이 사실로 확인되지 만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할 수 없다면서 인사 보복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성폭력 혐의를 받은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도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에 성비위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법무부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이자 성폭력 문제 활동가인 권인숙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는 법무부·검찰 및 산하기관 내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범죄 피해 경험을 전수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7천407명 중 61.6%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검사가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응답 비중이 70.6%로 높았고, 의도적인 신체 접촉 피해 경험도 응답자의 22.1%에 달했다.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에서 배제하라고 문체부에 주문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권고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도 미투 운동의 파도를 겪으면서 각자 성폭력·성차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4월 12일 대법원은 여학생 성희롱으로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내면서 "성범죄 사건을 판단할 때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고 적시했다.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최초 판결로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지 따질 때 성범죄의 특수성, 특히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안에서의 피해자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면했다. 8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수행비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지원한 여성단체 측은 "권세나 지위에서 나오는 '위력'은 그 존재 자체로 부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원 앞과 도심에서는 이후 몇 주 동안 재판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검찰이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이윤택 연출가는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중에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19일 1심에서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늦게나마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일 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진술 내용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미투는 혁명”...일부 남성 반발도

미투 운동은 그동안 가부장제 영향 아래 남성 중심으로 짜여 있던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뿌리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학계는 물론 사회학·정치학계 등에서도 대다수 학자가 “미투는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일반 시민들도 미투 운동에 긍정적인 태도였다. 한국갤럽이 3월 20~22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8%가 '미투 운동을 좋게 본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남녀 비율도 여성 69%·남성 68%로 비슷했다.

미투 폭로자를 향한 성차별·혐오 발언도 들끓었다. 서지현 검사, 안희정 전 지사 수행비서 등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유명 인사를 가해자로 지목한 폭로자들을 향한 뒷말이 무성해 2

차 가해'라는 지적이 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투 운동이 여권 신장 운동으로 확산하자 남성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한 인터뷰에서 유래한 ‘펜스 룰’ 개념이 남성들 사이에 유행했다. 미투 운동 자체를 ‘무고’나 ‘꽃뱀’ 프레임으로 폄하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여성계는 이를 ‘백래시(backlash·반격)’라며 비판했다.

유튜버 양예원 씨가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5월 폭로하고, 이에 스튜디오 측에서 ‘양 씨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촬영에 자의적으로 임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남성 사이에서는 “미투를 악용한 무고”라는 반발 여론이 불거졌다. 6월에는 ‘무고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는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남성 피고인이 9월 법정 구속되고, 피고인의 아내가 억울하다고 온라인에 글을 올리자 남성들 사이에서 ‘사법부가 성범죄에 유죄 추정 원칙을 틀어막고 있다’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10월 말 혜화역에서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남성 집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참가자는 100여 명으로 적었다. 이 집회 자체가 해당 사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면서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연 남성들도 있었다.

■ 페미니즘 사회적 관심 높아져...법·제도 개선은 미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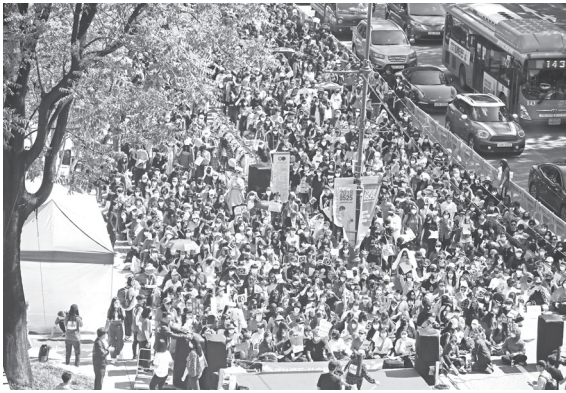
미투 운동 이후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대표적인 페미니즘 소설로 꼽히는 조남주 작가의 '82년 생 김지영'은 출간 2년여 만인 11월 누적 판매 수 100만 부를 돌파해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다. 10~20대 여성 사이에서는 '코르셋'(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유·무형의 여성성)을 벗자는 '탈(脫) 코르셋' 운동이 번졌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스쿨 미투'가 번지면서 10대 사이에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커지는 데 기여했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여학생들의 얼굴·몸매를 평가하거나, '여학생은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등 성차별 발언을 일삼는다고 폭로했다.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10~20대 남학생 사이에서는 여전히 여성권 신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투 운동은 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시위로 이어졌다. 5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불법촬영(몰카) 사건의 여성 가해자가 구속되자 (경찰이) 남성이 성범죄 피해를 보자 여성 피해 때보다 강력 수사를 펼친다'며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5월 19일 혜화역 근처에서 '성 편파 수사 규탄시위'가 열려 여성 1만2천여 명(경찰 추산 1만 명)이 운집했다. 이른바 '혜화역 시위'로 불린 온라인 카페 '불편한 용기' 주최의 이 여성 시위는 혜화역과 광화문에서 총 6차례 열렸고, 매번 1만 명 이상의 여성이 모여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시위로 기록됐다.



▲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5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공정한 수사와 몰카 촬영 및 유희, 유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술자리 문화와 접대 문화가 바뀌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들은 술자리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2·3차를 노래방으로 가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성 평등 인식이나 젠더 감수성이 사회 전반에 퍼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대하거나 농담의 대상으로 삼았던 과거 성차별적 분위기만큼은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성계는 미투 운동이 유의미한 법안 제·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미투 운동 이후 관련 법안 140여 개가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30여 건뿐이다.

강간죄 구성요건이 여전히 '피해자의 항거 여부'에 맞춰져 있다는 점, 폭로자 공격 수단이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지 않은 점,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제로 할 경우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되지 않은 점 등이 여성계의 주요 불만 요인이다.

주 52시간 근무시대 개막과 최저임금 인상 논란

■ 개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 기조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은 근무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분야에서 잦은 논란을 불러왔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대다수가 공감했지만 변화 속도가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6%가 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근무시간 단축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말 출범한 홍남기호(號) 경제팀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등 정책이 정책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 일부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문제가 된 점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존 틀은 유지·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 최저임금 16.4% 인상·실질소득 올랐지만 영세 자영업자 반발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소 임금이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명목으로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로, 지원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 자영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했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인상을 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보완대책도 발표했다.

정부의 지원에도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 부진과 맞물리면서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발은 즉각적이었지만 애초 기대했던 소득 증가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았고 경기 지표는 오히려 더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4월 발표된 1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평균소득(2인 이상 가구, 명목 금액 기준)은 128만6천700원으로 전년 1분기보다 8.0% 줄었다. 2003년 해당 통계를 낸 이후 최대 감소 폭이었다. 이에 반해 상위 20%(5분위)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9.3% 증가했다.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0.60 상승해 2003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이 됐다.

야당 등은 이런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부가 가계동향 조사 표본의 고령자 가구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소득·분배 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꼽아 통계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오르면서 인상 속도 논란은 계속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은 2년 연속 1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